

문서번호 행정 2014-0401

수 신 박근혜 대통령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6.4 지방선거에 국가기관들이 또 다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날 짜 2014. 4. 15. (총 2 쪽)

6.4 지방선거에 국가기관들이 또 다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공동대표 : 김균, 이석태, 정현백)는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각종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진상규명도 충분하지 못하고, 청와대와 법무부, 국정원은 검찰 특별수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선거에 불법개입했던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기구는 여전히 활동 중이며, 국민을 향한 사이버심리전 기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행위로 형사재판 중이고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처럼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건대, 과연 어느 국민이 국가기관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불법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3. 참여연대는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이 사이버심리전을 빙자해 여론을 왜곡하는 활동을 하거나, 사회단체나 누리꾼을 배후조종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활동을 하게 하거나, 안보교육을 빙자하여 정치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내용을 강연하게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특정 사건을 기획수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또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불법개입하는 어떤 행위도 시도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법개입한다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행동이 다시 일어날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귀 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들이 또 다시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뜻을 왜곡

하는 일을 시도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